고객과 함께하는
동양저축은행
Tel.(062)226-018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제17596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6년 11월 8일 (음력 9월 18일) 수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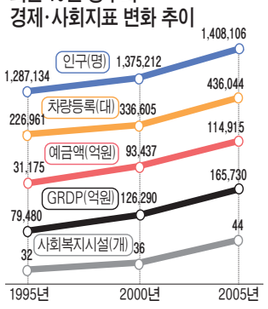
광주 10년새 어떻게 바뀌었나

인구 12만명 늘어 아파트·車 2배로

지난 10년간 광주지역은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주택, 차량, 수출액, 지역내총생산(GRDP)등 경제적 '몸집'은 크게 불어났지만 사회복지시설 확충 등 복지 수준의 향상 속도는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자 고등학생의 몸무게와 키가 10년 전에 비해 7.4kg, 2.8cm나 늘어나는 등 청소년들의 신체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지구 온난화의 영향에 의해 광주시의 연평균 온도는 10년 전보다 0.2도 올랐다.

■최근 10년 광주의 경제·사회지표 변화 추이



GRDP 16조 108% ↑

7일 광주·전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0년 전과 비교한 광주의 경제·사회 변화상'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광주의 인구는 140만8천106명으로 지난 1995년 128만7천134명보다 9.4%(12만972명) 증가했다. 반면 저출산 기조로 인해 학생 수는 4.8%(1만9천54명) 증가에 그쳤다.

이같은 인구 증가는 주택 및 건설 수주액 증가로 이어졌다. 광주의 주택은 45만6천796가구로 10년새 29.1%(10만2천837가구) 증가했다. 특히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은 각각 2배, 4.2배가 늘어 주거문화의 대변화를 보여주었다. 건설수주액도 3조6천900억원으로 84.7%(1조6천900억원) 늘었다.

2005년 현재 광주시내 자동차는 43만6천44대. 10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운 92%(20만9천83대)나 늘었다. 또 전체 차량중 자가용 보유대수는 10가구당 8.6대로 '1가구 1자동차' 시대를 눈앞에 뒀다.

경제적인 외관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광주의 총 수출액은 71억8천900만 달러로 464.2%(59억1천500만 달러) 급증하면서 수입액의 2배에 달한다. 지역내총생산은 16조5천730억원으로 108.5%(8조6천250억원) 늘어났으며, 총예금액도 248.6%(8조3천740억원) 증가한 11조4천915억원을 기록했다.

교육 여건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학교 및 교원 수가 각각 27.3%(122개), 16.9%(2천264명) 늘어나면서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27명으로 9.4%(2.8명) 줄었다.

복지는 '제자리 걸음'

학생들의 경우 신체 성장 추세가 두드러졌다. 2005년 현재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의 평균 몸무게와 키는 69kg과 174.4cm로 나타나 10년 전보다 7.4kg, 2.8cm 늘었으며, 여고생도 몸무게(56.4kg)와 키(161.3cm)가 각각 2.6kg, 2.6cm 늘었다.

하지만 광주는 지난 10년간 복지증진 노력이 경제성장 속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시설(11곳)과 장애인복지시설(10곳)이 각각 4곳, 3곳 늘어나는데 그쳤으며, 아동복지시설은 10곳으로 10년째 '제자리 걸음' 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노무현 대통령이 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개막식 참석후, 1층 전시장에 마련된 광주시관에서 가사 도우미 로봇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혁신도시 건설, 광주·전남 모범"

盧대통령, 지역혁신 박람회 참석

'제3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가 7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됐다. 이날 개막식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 이용섭 행자부장관, 정세균 산자부장관,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 김성진 해수부장관 등 각 부처 장관과 전국 자치단체장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3면〉

노무현 대통령은 축사에서 "역대 모든 정부에서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했지만 참여정부는 지역혁신과 균형발전을 최우선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지역인재 양성과 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대학과 연구소, 지방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광주와 전남은 2개의 혁신도시를 한데 모아 공동혁신도시를 만드는 특별한 모범을 보여주었다"면서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시스템, 혁신하는 문화를 만들어 갈 때 혁신은 일회성 성과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에 대응해서 혁신을 이뤄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지역 이기주의, 그리고 지역간 대결을 통해서는 발전할 수 없다"며 "대결을 일삼아 나가다가는 모두가 실패할 수 있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이날 언급할 것으로 예상됐던 서남해안개발계획(S프로젝트)에 대해서 노 대통령은 특별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김한길, 통합신당 공식화

"與 정치실험 끝났다…내년 4년중임제 개헌 필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7일 "우리당의 창당은 정치사에 크게 기록될만한 의미있는 정치실험이었으나 이제는 정치실험을 마감하고 지켜가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려내서 또 한번 '다시 시작하는 아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행한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로 인해 정기국회 이후로 미뤄졌던 여당내 정계개편 움직임이 가시화될 수 밖에 없게됐다. 〈관련기사 4면〉

김 대표는 "통렬한 반성과 자기반성을 통해 변화의 메시지를 던져야 할지, 창당정신과 우리가 추구해 온 가치를 새롭게 확인하면서 더 열심히 일해보겠다는 결의를 다짐할지 고민했다"며 "당의 진로는 정기국회를 끝내놓고 나서 결론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대선이 있기 전인 내년 중에 정치 안정화와 정치비용 절감을 위한 최소한의 개헌이 필요하다"며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와 선거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개헌론을 제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달라 매번 대선과 총선이 불규칙하게 엇갈리는 상황이 계속되는 한 우리 정치의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에 손대지 못하면 다시 20년을 기다려야 한다. 필요하다면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 역시 검토할 수 있다"며 "한나라당은 현재의 높은 지지율 때문에 개헌이 가져올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 같다"고 한나라당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이어 그는 "서민경제가 어렵다면서 비판만 앞세우지 말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협력하는 것이 책임있는 공당의 도리"라며 경제 회복 종합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한 한나라당과의 정책협의회를 이달중에 본격 가동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값 폭등에 따른 대책과 관련, "부동산 제도개혁은 후퇴하거나 중단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전제한 뒤 "정부가 앞으로는 시세의 80% 이하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해줄 것을 요구하며 특히 신도시 등 공공택지나 도시재정비 사업지구, 즉 뉴타운 지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부터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원박람회·홍길동파크 전남도 대형사업 '제동'

행자부, 재검토 결정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정원박람회와 장성군의 홍길동 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사업 등 대형사업에 대해 정부가 사업 시기 부적절 및 연차별 투자계획 부실을 이유로 무더기 제동을 걸었다. 이로 인해 이들 사업은 물론, 유관 사업의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행정자치부는 7일 2006년 하반기 중앙 투·융자심사에 올라온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과 10억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 138건(총사업비 17조 5천180억원)을 심사해 이 가운데 전남도의 세계정원박람회 등 32건을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제외하는 '재검토'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800억원이 필요한 전남도의 세계정원박람회는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조성사업(J프로젝트) 개발계획 수립 이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사업비 485억원 규모의 장성군 홍길동 테마파크관광지 조성사업과 역시 장성군의 장성호 관광지 조성사업(238억원)은 연차별 투자계획이 적절치 않아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보성군의 강골 전통마을 조성사업(200억원)은 기본계획 수립 등 선행절차를 이행하라는 지적을 받아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됐음을 반영했다.

/박치경기자 unipark@